

당정협의 자료

이 자료는 4월20일 07:30분 이후  
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

2001. 4. 20

재 정 경 제 부  
금융감독위원회

52

## 1. 추진배경

□ 제도권 금융기관의 여신 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외환 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민들이 비제도권의 사채에 많이 의존

\* 신용불량거래자 : (97말) 149만명 → (2001.2말) 232만명

○ 이 과정에서 사채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요구 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공갈, 협박 등이 횡행함에 따라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

\*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경우를 보면 연간으로 환산하여 500~1,000%의 금리를 적용하거나 협박, 심야방문, 전화 등으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음

□ 이에 따라, 지난 3.24일 당정 합동으로 「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」을 추진하기로 발표하고,

○ 그동안 당정간 Task-Force\*를 구성,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였음

\* 재정부, 금감위, 공정위, 국세청, 검찰, 경찰, 국세청, 금감원, 은행연합회 등이 참여

◇ 현행 법령하에서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신용불량자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,

○ 사채업자의 양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이용자 보호에관한법률(가칭)의 제정을 추진

## 당정협의자료 일부수정 안내

2001. 4.20 오전에 배포된 당정협의자료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당 초	변 경
<p>○3쪽 마지막 줄</p> <p>동 제도 개선으로 최대 99만명이 혜택을.....</p>	<p>○3쪽 마지막 줄</p> <p>..... 최대 99만명 이상이 혜택을....</p>
<p>○5쪽 마지막 줄</p> <p>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등을 거쳐 4월말 또는 5월초 국회 제출</p>	<p>○5쪽 마지막 줄</p> <p>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등을 거쳐 추후에 확정</p>

2001. 4. 20(금)

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 
공 보 관

## 2. 서민 금융이용자 보호대책

### 부당한 채권추심, 고리대금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

- 금융감독원에 “사금융 피해 신고센터”를 설치(4.2일 기설치)
  - 4.2~4.17일중 총 529건 접수되어 이중 204건을 국세청, 경찰, 공정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
  - 국세청에도 “고리 사채업자 신고창구”를 설치
-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검찰, 경찰, 국세청, 공정위, 금감원이 합동 단속 실시
  - 채권추심과정에서의 폭행, 공갈, 협박과 사채업자의 탈세 등 현행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

### 신용불량자 제도의 개선

- ① 연체금을 변제한 자중 금융질서문란자\*를 제외한 선의의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기록을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삭제(5.1시행예정)
  - \* 사기·결탁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, 대출약정을 위반한 경우, 금융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, 카드 위변조·도용 등
  - 4.30일 현재 연체금 변제자에 적용하되 이후 1개월이내에 변제하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
  - 은행연합회 기록의 삭제와 함께 개별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자체보유한 기록도 삭제되도록 금융감독원이 지도
  - \* 은행연합회의 기록이 삭제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이 보유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지 않으면 동 조치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음

② 연체금 상환 즉시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는 범위를 확대  
(5.1일부터 시행 예정)

- 카드 100만원이하, 대출금 500만원이하  
→ 카드 200만원, 대출금 1,000만원

③ 소액 신용불량정보에 대한 관리 완화(하반기 시행예정)

- 30만원이하의 카드연체 및 100만원이하의 대출금 연체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유예기간을 연장

- 현행 3개월 → 6개월

- \* 현재 관행적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전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있으나 금감위 규정상에는 신용불량자 등록전 또는 등록후 15일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신용불량자 등록 이전에 충분한 기간(예 : 1개월)을 두고 통보하도록 함

④ 연체금 변제후 신용불량 기록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체계도 단순화(7.1일 시행예정)

- 현행 3단계 1~3년 → 2단계 1~2년

- \* 단, 금융질서문란자의 경우는 5년을 유지

현행		개선	
· 불량등록기간 6개월 이내	: 1년	⇒	불량등록기간 1년이하 : 1년
· 불량등록기간 6개월 ~1년 이내	: 2년		불량등록기간 1년초과 : 2년
· 불량등록기간 1년 이상	: 3년		

⑤ 악의적인 신용불량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

-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고의 및 중과실에 의한 분식회계가 확인된 자의 경우 금융질서문란자에 포함

⇒ 동 제도 개선으로 최대 99만명(연체금 변제후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)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## 신용카드 발급기준의 강화

- ☐ 카드대금의 변제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자에 한하여 카드가 발급되도록 하여 신용불량자 증가를 사전에 차단
  - ☐ 금감위 규정상의 “소득이 있는 자”의 세부기준을 엄격하게 운용
    -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등의 일정소득이 확인되는 자
    -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등 일정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자
    - 연금 수령, 이자소득 등을 통하여 일정소득이 있음을 의제할 수 있는 자
    -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소득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
    - 일정 소득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자의 결제의사확인 또는 보증이 있는 자
- ⇒ 4.21일까지 신용카드업자가 동 내용을 반영하여 회원 자격기준을 정비토록 하였으며, 그 이후부터 금융감독원이 각 신용카드업자의 시정조치결과 및 신용카드 관련 업무의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

## 카드사 등의 높은 연체이자율에 대한 제재 강화

☐ 시장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높은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카드사 등에 대해서는 행정제재

- 공정위가 지난 3월에 3개 카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함
- \*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정시 연체이자율의 최고수준과 제재근거 등을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

##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(가칭)의 제정 추진

☐ 사채업자의 양성화,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 및 건전한 여신관행 유도를 위하여 「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(가칭)」의 제정을 추진

### ○ 사채업자의 등록을 의무화

- \* 사채업자는 지방자치단체(시·도지사)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

### ○ 사채업자에 대한 제한적인 이자제한 규정을 도입

- \* 사채업자의 개인 및 소기업 등 서민에 대한 일정금액이하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설정

### ○ 건전한 여신관행의 정착을 유도

- \* 사채업자 및 제도권 금융기관이 자기채권추심행위를 함에 있어 폭행, 협박, 사생활 침해 등 불법적인 행위를 금지
- \* 대출계약을 맺을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

### ○ 연체이자율에 대한 최고수준 및 제재근거 등을 규정

☐ 관계기관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4월말 또는 5월초 국회 제출

< 참고 > 사금융 피해 신고 현황(4.17일 현재)

☐ 신고접수 수단별 접수 현황 : 총 529건

	4.2~10	4.11~4.16	4.17	합계
전화	289	166	22	477
Fax	4	-	-	4
면담	13	17	5	35
인터넷·민원	5	4	4	13
합계	311	187	31	529

☐ 신고자의 신고내용 현황

	4.2~10	4.11~4.16	4.17	합계
고금리	196	121	18	335
부당 채권추심	25	2	3	30
현저한 불공정	8	3	1	12
기타 부당행위	34	16	5	55
단순상담	48	45	4	97
합계	311	187	31	529

☐ 신고자의 익명 또는 실명신고 여부

	4.2~4.10	4.11~16	4.17	합계
익명	121	25	6	152
실명	190	162	25	377
합계	311	187	31	529

☐ 관계기관앞 통보업체수 : 총 204개